



씻기지 않는 제조업의 눈물 2題

‘키코 10년’… 손실액 3兆 피해 기업 ‘숨통’ 트이나

내달 금감원 분조위 상정·심의 대규모 손실 중소기업 4곳 대상 피해기업 ‘합의안 합당시 협력’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놓고 10년 가까이 외로운 싸움을 해오고 있는 피해기업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합당한 합의안’이 나올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이 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안전을 내달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환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만 총 919곳에 달한다. 또 이들의 키코 피해금액은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키코 피해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에 따르면 키코 가입을 통한 기업들의 실제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 은행 6곳과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4개사가 지난해 7월 민원을 접수해 6개월간 기업체와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치고 현재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키코 상품은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뿐만 아니라 KEB하나은행(전 외환은행 포함),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국내은행에서 취급했었다.

키코 피해기업 요청사항

- 키코 피해 수출기업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보증 정책 필요
- 사회적 합의 통해 정부·은행·기업이 합리적 수준으로 분담해 피해기업 정상화 방안 마련
- 창업 및 경영 실패자들이 도전하고,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법적 책임 요건 완화
- 파산신청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의 정리매매 기간 보유지분을 매각한 경영자들의 경영권 책임을 물어 기업 부채를 탕감해 줘야함
- 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키코 사태의 진상조사를 통해 피해기업들의 명예와 환헤지 상품의 신뢰 회복 절실
-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규 여신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키코공대위 조봉구 공동위원장은 16일 “전제한 ‘합당한 합의’란 분쟁조정 결과가 키코 상품을 판 은행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존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가능하다”면서 “다만 피해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의 0.0%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결과가 나온 후 은행들의 수용 여부도 중요인데, (조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귀책사유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코공대위와 피해기업들은 환헤지를 하기 위해 가입했던 키코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익 제한적, 손실 무한대’의 왜곡된 상품으로 판명되면서 은행들이 사실상 ‘사기상품’을 판매했다고 꾸준히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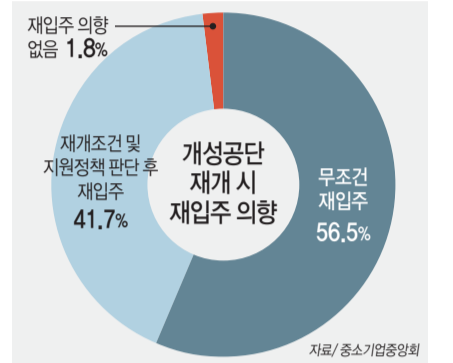
해왔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순 변호사는 “은행이 고객인 기업에게 키코를 팔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를 했고, 이것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실상 환헤지를 하고 환변동 위험을 회피한다고 (판매)했던 키코는 같거나 비슷해야 할 옵션가치가 많게는 2000% (20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왜곡된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키코를 판매했던 기업들이 통화옵션을 팔 때 (풋옵션)와 살 때 (콜옵션)의 합산가치를 ‘0’, 즉 ‘제로 코스트’라고 설명했지만 향후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에선 두 옵션의 차이가 적게는 1.5배부터 5.7배까지 차이가 나 사실상 키코 상품을 통해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커 이 같은 위험을 숨겨놓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폐쇄 4년째 개성공단 기업 90% “경영악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지 4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10곳 중 9곳은 가동 중단 이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곳은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꿈은 놓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업은 공단의 문이 열리면 다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간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가동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0곳 중 1곳은 ‘사실상 폐업’ 상태 절반 이상은 “재개시 무조건 입주” 애로사항 1위 노무비 등 경영자금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환경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6.9%가 ‘중단이전 대비 경영 상황 악화’라고 답했다. 9.3%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중단이전 대비 경영상황 호전’ 기업은 고작 5.5%였다.

개성공단의 문이 열릴 경우 재입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8.2%가 다시 들어갈 원하고 있다. 56.5%는 ‘무조건 재입주’를, 41.7%는 ‘정부와 북측의 재개 조건 및 지원정책 등 상황 판단 후 재입주’ 의사를 각각 밝혔다. ‘재입주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재입주 희망 이유로는 ‘국내의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 보유’가 72.6%로 절대적이었고, ‘개성공단 외 대안이 없어서’는 17%였다.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원자재 구입, 노무비 등 경영자금 확보 문제’였다. 61.1%가 이를 택했다. ‘거래처 감소에 따른 주문량 확보 문제’ (23.1%)도 애로였다. 재입주를 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았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해결사항 1순위로는 ‘국가의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 (66.7%),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해결’ (20.4%),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 기금 조성’ (6.5%)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절반 가량은 개성공단이 올해 또는 내년 중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27.8%가 ‘2019년 내에’, 26.9%가 ‘2020년 중’으로 시기를 꼽았다. 2021년부터 현 정부 임기내에 재개될 것이라 답변도 18.5%였다. 10곳 중 7곳이 문재인 정부내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기대치’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기자

‘비가동 휴무제’에도… 르노삼성 노조, 파업 강행

19일 노사 재교섭 이뤄질 듯

르노삼성자동차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부산공장 ‘비가동 휴무제’를 감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오는 17일과 19일, 주야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후 르노삼성 노조가 실시한 파업은 전날 기준 총 58차례, 234시간으로 늘었다.

노조는 오랜 파업으로 조합원의 참여가 감소할 것에 대비해 불참자 징계가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교섭은 19일 이뤄질 전망이다.

르노삼성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늘 양보교섭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 사측이 수용하지 않

는다면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노조는 추가 인원 200명 투입, 생산라인 속도 하향 조절, 전환배치 등에 대한 인사 경영권의 합의 전환 요청 등을 협상 막판에 의제로 제시하며 사측의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인사 경영권은 전환배치, 인원 투입 등이 현재 협의로 되어 있어 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며 “지금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협력업체”라고 전했다.

사측은 오는 29일과 30일, 다음달 2일과 3일 등 총 나흘간 부산공장 비가동 휴무를 진행하겠다고 노조와 부산공장에 통보한 상태다. 다음달 1일인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하면 기간은 총 5일이다.

업계에서는 생산물량 감축에 따른 추가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낫산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물량 차질 등을 이

유로 올해 로그 위탁 생산량 4만 2000대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 중 2만 4000대는 일본 규수공장으로 이관된 상태다.

한편 이기인 르노삼성 부사장(제조본부장)은 최근 르노삼성 노사 갈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지난 12일 작성한 ‘부산공장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손편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직원이라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은 “우리는 외국계 기업에 소속된 하나의 자회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최근 르노삼성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등 강경 투쟁을 지속하는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중기부 내 AI 관련 ‘벤처형 조직’ 만들 것”

박영선 장관 스마트공장 방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처 내에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벤처형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제조기업의 생산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공급기업 육성방안’도 6월 중순께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16일 경기 시흥에 있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 스마트 공장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기부 내에 AI를 비롯해 벤처 조직을 3개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기존 정부 조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같이 빠른 변화에 제 때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부처 장관이 조직내에 과장급의 ‘000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 공장 관련 솔루션 등을 통합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경기 시흥에 있는 중소기업 비와이인더스트리를 방문, 스마트 공장 관련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적으로 제공하는 공급 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스마트 공장) 공급업체가 발전해야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고, 공급업체 비즈니스가 수출에도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급업체 육성 계획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호·배한님 기자